월요광장

다시 사상의 자유를 말한다

강 용 주
광주트라우마센터장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50% 넘는 국민이 찬성했다고 합니다. 찬성에서 보여주듯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하고도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게 민주주의 위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사회적 압력은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솔로몬 에쉬는 사회적 압력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실험을 했습니다. 10㎝의 선을 그린 카드를 보여준 뒤 5·10·15㎝의 선을 그린 석 장의 카드 중 같은 길이의 카드를 고르게 하는 실험이지요. 정답은 당연히 두 번째 카드지만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홉 명은 미리 약속한 대로 5㎝의 선이 그려진 카드가 정답이라고 대답합니다. 열 번째 사람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실험 결과, 틀린 줄 알면서도 아홉 명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답이지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회적 사안은 애매모호하고 정답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형성 과정에서 사회적 압력이 '일치'와 '동조'를 강요하는 '다수의 전제'로 나타나는 거지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 떠오릅니다.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머지 사람 전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전자가 '다수의 전제'라면 후자는 '소수의 전제'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권위주의 정권이나 히틀러의 독재가 바로 '소수의 전제'로, 이는 누구나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국민 다수가 지지한다는 이유로 개인이나 소수자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역시 '다수의 전제'로, 똑같이 잘못된 일입니다.

밀은 시대라는 것도 개인만큼 오류를 범하기 쉽다고 말합니다. 어떤 시대에 진리로 여겨지고 옳은 일로 믿었던 신념도 훗날 되돌아보면 '천동설'이나 '유신헌법 비판 금지-긴급조치'처럼 터무니없고 불합리한 의견이 많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람들이 동의하고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많은 의견도 시간이 지나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고 다음 시대에 의해 부정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진실된 의견이라도 그것을 충분히, 자주, 아무런 두려움 없이 토론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진리'가 아니라 '죽어버린 독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리가 독단이 아닌 살아 있는 게 되려면 밀이 강조했듯 '사상의 자유시장'이 필요합니다. 1995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진리는 사상의 충돌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다. 어떤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 최고의 검증방법은 그 주장이 사상의 시장에서 벌어지는 경쟁 속에서 수용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사상의 자유는 찬성하거나 동의하는 자유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유는 '사문난적'의 조선시대에도, '마녀사냥' 하는 중세에도 있었습니다. 오래전 미국 연방대법관 홈즈가 말한 내용이 떠오릅니다.

"헌법의 원칙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중시해야 할 것은 사상의 자유의 원칙이다. 우리와 의견이 같은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을 위한 자유의 원칙을 뜻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다수가 반대하고 싫어하는 의견이나 주장이더라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이 아닌 이상 자유롭게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논쟁하고 토론하여 국민이 선택하도록 해야지요.

미국에서는 이런 판결도 있었습니다. 1984년 레이건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반대하여 성조기를 불태우며 시위한 그레고리 존슨은 텍사스법에 따라 처벌됐지만 연방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를 적용, 성조기를 불태운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성조기가 상징하는 미국의 힘은 경직성이 아니라 융통성에 있다. 국기 모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성조기가 상징하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동이다"고 말이지요.

민주주의가 무조건 다수결의 원리에 따를 경우 '다수의 전제'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사회적 압력에 의한 일치가 아니라 소수의 의견을 '공존 가능한 이견'으로 배려하고 존중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나아가, 소수 의견이 토론과 선거를 거쳐 다수 의견이 될 수도 있는 체제라야 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습니다.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을 50%가 넘는 국민들이 찬성했지만 정윤회 의혹을 희석하기 위해 정당 해산 결정 시기를 그렇게 정했을 거라는 응답도 46.2%로 나왔습니다. 두 가지 여론조사가 겹쳐 보이는 것은 왜 일까요?

법조칼럼

사이버 공간 범죄에 대한 단상

김 정 옥
광주지검 검사

2014년 갑오년도 며칠 남지 않은 지금 '사이버 공격'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소니픽처스는 해커들의 공격을 받고 영화 '인터뷰'를 개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가 미국 내 여론을 고려하여 미국 독립극장을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개봉하기로 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도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의 테러 가능성이 문제되고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혁신적인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종전에는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는 비단 국가기반 시설이나 대기업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사이버 범죄는 그 외에도 악성프로그램의 전달 또는 유포, 개인정보 유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한 사기, 음란물의 유포,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또한 사이버 범죄는 익명성, 비대면성, 시간적 공간적 무제약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어 전통적인 범죄와는 다른 양상을 갖게 된다.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범죄자들은 본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조차 알지 못하거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또는 물질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터넷 상에 유명인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게시물이 게재되는 경우가 있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이런 재밌는 글이 있네'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해당 게시물을 다른 블로그, 게시판 등에 옮겨 나르거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옮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등장으로 인해 정보의 전파 속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반나절 정도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전국민에게 소식이 전파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니 말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글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전파되는 경우, 과거와 달리 그 전파범위가 광범위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피해자들이 충격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우리들에게 혁신적인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는 기술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나와 내 이웃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 선량한 피해자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인터넷 해킹과 같은 사이버 범죄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크지 않은 규모의 중소기업들도 위협하고 있으며 회사 경영에 중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 해커들이 회사의 서버에 침입하여 중요 기밀 자료를 유출하거나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다른 회사들에 판매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 등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으나, 해커들의 범죄 수법은 점점 지능화하고 있고, 해커들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 기업들은 손해배상 소송 등에 직면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 경위, 유출되는 정보의 범위 등에 따라 다르지만, 법원이 1인당 10만원 내지 2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 회사들도 해커들에 대응한 보안강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항상 방패가 이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이버 공간은 이용자들이 제대로 활용할 때에는 문명의 이기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고의이든 과실이든 이를 잘못 활용하면 문명을 파괴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사이버 상에서 스미싱(Smishing), 피싱(Phishing) 등 다양한 신종 기법들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금융 관련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연말 연시를 맞아 새해인사, 연말정산, 선물 등을 약용한 스미싱 유형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는 수사기관에 많은 숙제를 안겨 주고 있다. 수사기관에서도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양성하고 수사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에는 기술의 발전이 가져다 준 문명의 이기를 보다 성숙한 자세로 이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사이버 범죄가 줄어들기를 기대해 본다. 물론 필자도 쉼 없이 뛸 것이다.

옴부즈맨 칼럼

지록위마(指鹿爲馬)와 언론

강 대 석
광주일보 독자위원회 위원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된 지록위마(指鹿爲馬)가 송년회 술자리에서 심심찮게 회자 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지록위마는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 나오는 이야기다. 환관 조고(趙高)가 어리석은 호해(胡亥)를 황제로 옹립하고 자기의 권위를 시험하기 위해 사슴을 바치며 말이라고 했던 일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윗사람을 농락해 권력을 휘두르는 행위나 사실이 아닌 것을 억지로 우겨 강압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언론사에서 수집한 금년도 지록위마의 순위를 보면 1위가 '국정개입은 했지만 선거개입은 안 했다'(원세훈 판결문), 2위가 '공문서 위조는 했지만 간첩조작은 아니다'(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3위는 '56조원 빚은 남겼지만 실패한 자원외교는 아니다'(경제부총리) 4위가 'KBS에 협조요청은 했지만 언론통제는 아니다'(청와대) 등이다. 정말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다. 올 한해를 개그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 또한 우습다.

지록위마의 행위를 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것은 위에서 보듯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치인이나 법조인 등 권력이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적시하고 비판하여야 할 언론이 본래의 소임을 저버리고 사실의 전달에만 급급한 책임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이 절대 왕정 아래서 5백년을 버틴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절대 권력에 대하여 목을 내놓고 간언할 수 있는 언관제도라고 할 수 있다.

언관은 3사 즉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을 말하는데 여기에 속한 관리들은 지금과 같은 언론기관이 없던 시대에 일종의 국립언론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 임무는 주로 왕권을 견제하고 바른 정치를 하도록 간언하는 일이었다.

일례로 연산군일기에 의하면 사간원 정언(정6품) 권균과 사헌부 지평(정5품) 이자견이 묘(廟)를 옮기는 것을 반대하자 화가 난 연산군이 권균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당장 국문하라고 하명한다. 이에 이자견이 나서 "대간의 직을 둔 것은 일을 말하라고 한 것인데, 혹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을 논한다 하여 옥에 잡아 가둔다면 사람들이 장차 입을 다물어 언로(言路)가 막힐 것이니, 성치(聖治)에 손상이 있을까 걱정됩니다."라고 거들었다. 왕은 "대간(臺諫)의 말도 들을 만해야 듣는 것이지 만약 안 들으면 매양 언로가 막힌다고 말한다. 대간 역시 신하인데, 꼭 임금이 그 말을 다 듣는 것이 옳은가? 그렇다면, 권력이 위에 있지 않고 대각(臺閣)에 있는 것이다." 하였다.(연산군 2년 5월6일), 조선시대 언관들의 간언이 얼마나 집요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언관들이 목을 내놓고 간언하는 언관(言官)제도가 있었기에 절대 권력이 부패하지 않고 5백년을 버텼던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요즘은 어떤가? 연말 청와대 문서 유출 정국에서 보듯 역린을 건드린 공직자는 직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언관(言官)의 역할을 당연히 언론이 맡아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언론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언론 중에서 선택을 하라면 주저 없이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고 했다. 이 말은 언론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가를 이야기한 것이다.

공직사회의 내부 간언과 견제가 사라진 지금 국민은 언론의 역할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 발로 뛰어 진실을 캐내고 꺾이지 않은 양심으로 정론 직필 하는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대다. 혹자는 언론의 자유를 말하지만 어둠이 있기에 촛불이 필요한 것이다. 지방언론으로서 한계는 있겠지만 광주일보가 그 중심에 서기를 기대한다.

社 說

커져가는 원전불신 이대로 둘 것인가

원전 자료 유출의 파문이 수습되지 않는 가운데 영광지역 주민들이 사용후핵연료 처리 관련 여론수렴을 거부하는 등 정부정책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또 가스 누출로 신고리원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원전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조 석 사장은 28일 원전 자료 유출사건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통해 "지난 9일 이후 사이버공격 시도가 진행되고 있지만 방어를 적극 취하고 있고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는 원전에 전혀 영향이 없어 안전을 100% 장담한다"고 강조했다.

보름째 어떤 자료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기초적인 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뭘 믿으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자료가 정확히 한수원에서 나갔는지도 모르고 검찰 수사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 도무지 미덥지를 못한 것이다.

영광 주민들의 불신도 높아가고 있다. 주민들은 향후 처리해야 할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확정하지 않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주민 의견만 수렴하겠다는 여론조사를 전면 거부키로 했다. 정부 방침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짜맞추기식 여론수렴을 한 뒤 결국 영광에 추가 핵시설을 들여오고 원전의 수명만 연장하려는 속셈이라는 주장이다.

우리는 주민들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제는 선심성 예산과 밀어붙이기식의 옛날 방식으론 어림없다. 극도로 예민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더디더라도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이 투명하고, 안전에 대한 합리적인 설득과정을 거쳐야 한다.

올 한해 원전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와 비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지난 26일에는 울산 신고리원전 3호기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3명이 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형 위기의 예비신호는 아닌지 두렵기까지 하다. 원전사고는 한 번 터지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교육시설서 초등생 체벌로 숨지다니

여수시 화양면에 있는 불법 민간 체험교육 시설에서 초등학생 A(12·6학년)양이 체벌을 당한 뒤 하루 만에 숨졌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 시설은 미인가 교육시설로 교사 자격증도 없는 일반인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시설 운영자인 황모(41·여)씨는 지난 25일 오전 3~7시께 A양을 매와 손 등으로 때리고, 이 과정에서 A양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을 일으켰을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양의 허벅지 등에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고 한다.

경찰은 황씨가 지난 2012년 3월부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A양이 문제 행동을 보여 이를 바로잡으려고 체벌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 2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어떻게 같은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멍이 들도록 체벌한 것도 모자라 뇌진탕으로 사망에 이르게까지 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또 황씨는 지도 자격이 없고,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시설 자체가 불법임에도 교육청이 왜 장기간 방치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시설은 학교라는 명칭을 내걸고 자연·악기·미술·놀이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안 배움터'를 표방하며, 주말마다 초등생을 대상으로 진행해왔지만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대안학교가 아닌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강제할 법이 없다는 말만 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미인가라 할지라도 교육시설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관계법령 개선과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나 다를 바 없다. 미인가 교육시설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마당에 이를 방치한다면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는 것이다. 당장 각 지자체와 이들 시설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행정상 문제가 있다면 폐쇄 등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無 等 鼓

아듀! 2014

"몹시 슬플 때에는 해지는 풍경을 좋아하게 되지…."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1900~1944)의 대표작 '어린 왕자'(The Little Prince)에 나오는 인상적인 대목이다.

사막에 불시착한 조종사 앞에 불쑥 나타난 어린 왕자는 자신이 살던 소행성 'B-612호'는 워낙 작은 별이기 때문에 의자 방향을 조금만 돌려놓아도 언제든지 해지는 광경을 바라볼 수가 있다고 말한다. 어린 왕자는 자기별에서 하루 43번의 일몰을 봤다고 했다.

우리말로 일몰은 '해넘이', 일출은 '해돋이'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자연현상이지만 연말·연초에는 의미가 각별할 수밖에 없다. 어린 왕자의 별과 달리 우리가 발딛고 사는 '지구별'에서는 비행기를 타지 않는 이상 하루 한차례만 해가 뜨고, 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뿐이다.

"…바다가 문닫을 시간이 되어 쓸쓸해지는 저물녘/ 퇴근을 서두르는 늙은 우체국장이 못마땅해질지라도/ 나는 바닷가 우체국에서/ 만년필로 잉크냄새 나는 편지를 쓰고 싶어진다/ 내가 나에게 보내는 긴 편지를 쓰는/ 소년이 되고 싶어진다…"(안도현 '바닷가 우체국' 중에서)

최근 국토 최서남단인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에서 이색 편지발송 행사가 열렸다. 올해 가거도를 찾은 관광객 등이 '느린 우체통'에 넣은 219통의 편지와 엽서를 신안군 가거도 출장소가 모아두었다가 연말에 맞춰 띄운 것이었다. 바닷가 우체통에서 자신이나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짓글은 분명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으리라.

올해는 유난히 힘든 한해였다. '세월호'의 아픔이 내내 가슴을 짓눌렀고, 청와대 문건 유출은 권력의 치부를 보여줘 서민들을 허탈하게 하였다. 관용과 배려가 없고, 남을 속이려고 옳고 그름마저 바꾸려 한 속 터지는 한해였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해가 저문다. 해넘이를 보며 마음 속으로 소지(燒紙)를 올린다.

올해 감내한 고통과 근심, 좌절을 훨훨 사르고, 새해에는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활기 넘치는 좋은 일들만 이어지기를…. 아듀! 2014.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